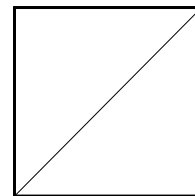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9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8. 26. (제 15 차)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8. 26.

1. 의결주문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을 위반한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 제48조(과태료)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52조(과태료) 제4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69조(과태료) 제1항
- 舊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제1항,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제5항, 제6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제3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제1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2020.7.16.) 심의필

<별지>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억 7,62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1억원)
②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시 관련사항 공시 누락(1,920만원)
③ 구속행위 금지 위반(3,540만원)
④ 감사위원회 보고서 미제출(2,160만원)
- 법적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 제48조(과태료)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52조(과태료) 제4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69조(과태료) 제1항

舊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제1항,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제5항, 제6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제3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제1항

2. 조치사유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
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은 2015.4.23.~2018.6.4. 기간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11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퇴직급여법」 제33조 제5항
2.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
3.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나.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시 관련사항 공시 누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1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는행은 2016.11.16. 및 2017.2.8. (주)●●●●●●, (주)①①①①①①①①과 각각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등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 2017.2.27. 및 2018.3.26. ㉠㉠㉠㉠(주), (주)◆◆◆◆◆◆◆◆와 각각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 포함된 자동차금융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을 공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법」 제31조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

다. 구속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하나는행은 2017.7.12. 비대면 휴대폰 앱을 활용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 판매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함에 따라

2017.7.17.~2017.8.18. 기간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9개사 및 신용 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1명 등 총 10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대출 (10건, 대출액 21억 1,950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펀드 10건(1,230만원)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관련 구속행위 현황

(단위 : 만원, %)

순번	구분	차주명	대출취급일	대출금 (A)	펀드가입일	납입금액	월수입 금액(B)	수취비율 (=B÷A)
1	■	■	XXXX.X.XX.	xx,xxx	XXXX.X.XX.	x,xxx	xx.x	x.xxx
2	■	■*	XXXX.X.XX.	xx,xxx	XXXX.X.XX.	xx	x.x	x.xxx
3	■	■	XXXX.X.XX.	xx,xxx	XXXX.X.XX.	xxx	x.x	x.xxx
4	■	■	XXXX.X.XX.	xx,xxx	XXXX.X.XX..	xx	x.x	x.xxx
5	■	■	XXXX.X.XX.	xx,xxx	XXXX.X.XX.	xx	x.x	x.xxx
6	■	■	XXXX.X.XX.	x,xxx	XXXX.X.XX..	xx	x.x	x.xxx
7	■	■	XXXX.X.XX.	x,xxx	XXXX.X.XX.	xx	xx	x.xxx
8	■	■	XXXX.X.XX.	xx,xxx	XXXX.X.XX.	xx	x.x	x.xxx
9	■	■	XXXX.X.XX.	xx,xxx	XXXX.X.XX.	xx	xx	x.xxx
10	■	■	XXXX.X.XX.	x,xxx	XXXX.X.XX.	xx	xx	x.xxx
합 계				xxx,xxx	-	x,xxx	-	-

* 법인 차주 3개의 경우 대표이사가 펀드를 가입함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2. 舊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5항, 제6항

라. 감사위원회 보고서 미제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은 2017년 상·하반기 감사위원회 보고서 2건을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음

감사위원회 보고서 제출 누락 현황

구 분	보고대상기간	보고기한	비고
2017년 상반기	2017. 1. 1.~2017. 6.30.	2017.7.31.	보고 누락
2017년 하반기	2017. 7. 1.~2017.12.31.	2018.1.31.	보고 누락

< 관련규정 >

1. 「지배구조법」 제20조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 제1항

(붙임1)

관계 법규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2019.12.31. 개정 이전)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처.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9호	3,000

舊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2017.10.17. 개정 이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처.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9호	2,500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① 영 제2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신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원화대출
2. 원화 지급보증 중 용자담보용 지급보증, 사채발행 지급보증, 상업어음 보증, 무역어음 인수
3.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보증어음 매입
4. 외화대출

③ 영 제24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⑤ 영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⑥ 영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판매하는 행위

- 가.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 나.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
- 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⑧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⑨ 감독원장은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제2항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을 따라야 한다.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9항 관련)

1. 과태료 산정방식

가.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대상 건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은행에 부과하는 경우 : 영 <별표 4> 제2호처목의 금액
- 2) 임원등 또는 직원에 부과하는 경우 : 영 <별표 4> 제2호처목의 금액

나. 구속행위의 동기 및 구속비율(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금액을 여신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대상건별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 1)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8조제7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 제88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월수입금액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2.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건에 대하여 구속행위의 동기 및 구속비율,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대상상품* 동기 구속비율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취급상품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은행취급상품	
	고의	과실	고의	과실
100분의 10 이상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미만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12.5%
100분의 2 미만	기준금액의 20%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5%

*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취급상품과 그 밖의 은행취급상품을 모두 판매한 경우 각 구분에 따라 산정된 예정금액 중 큰 금액을 해당 부과대상건의 과태료 예정금액으로 한다.

3. 최종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을 감면하거나 예정금액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에 따른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소기업은 제외한다)이 차주인 여신거래와 관련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경우 예정금액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제67조(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차주가 은행상품(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1호의 은행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입출금이 자유로워 전액인출이 가능한 은행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은행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한 경우
3. 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은행상품으로서 동 은행상품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가능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4.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상품 등 차주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에 가입하는 경우
6. 은행상품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한 후 해지금액 범위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
7. 규정 제88조제6항각호 적용으로 인해 차주의 불이익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

② 규정 제88조제6항제1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이 경우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동 은행상품을 2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월 정기납입식 은행상품의 경우 월 납입금액
2. 정기납입식 은행상품이나 월납이 아닌 경우에는 월납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다만 정기납 주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초회 납입금액을 일시납 은행상품의 입금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3. 자유적립식 은행상품의 경우 여신실행일 1월 전부터 여신실행일까지 납입된 금액과 여신실행일 후 1월 이내에 납입된 금액 중 큰 금액
4. 일시납 은행상품의 경우 판매당시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상품은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을 만기 또는 유효기간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상품은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을 만기 또는 유효기간을 12개월로 하여 나눈 금액을 적용한다.
 - 가.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은행상품(다만, 유가증권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을 제외한다)
 - 나.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은행상품
5. 일시납 금액과 정기납 금액 등이 혼합된 은행상품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③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3조제5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17조, 제18조, 제32조제1항 제1호마목 및 사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2. 법 제25조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6.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마.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2호	1천만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3.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은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영 제36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②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터.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5호	1,800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2017.10.17. 개정 이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터.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5호	3,000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감사인 경우에는 감사의 감사 현황을 말한다)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내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31조를 위반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7.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조회 회사만 해당한다)
-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추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금액
커.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4항 제9호	800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붙임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8.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 1억 7,620만원
임직원	○ 견책 : 1명 ○ 주의 :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회계 부당처리

☐ 「은행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을 따라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은 특수관계자 거래 및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1)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공시 누락 등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대손충당금 포함)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등

- 하나은행은 2013년~2017년 기간중 ■■지점(해외지점) 및 ■■■■■ 등 해외 종속기업과 해외관계기업(4개사*)간 거래 금액 및 채권·채무 잔액에 대해 공시를 누락**하였으며,

- 하나는행은 2016년~2017년 기간중 ■■■■■(해외종속기업)의 외국통화간 통화선도 계약금액을 수취 및 지급통화 기준으로 각각 이중으로 표시하는 등 아래와 같이 파생상품 계약금액을 과대 공시*하였음

* '16년 1,194억원, '17년 1조 2,311억원

(4) 미결제 현물환 관련 자산·부채 계상 누락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2조 등에 의하면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미결제 현물환)는 외국통화의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지라도 계약체결시점에 해당 거래를 인식해야 하는데도

- 하나는행은 2014년~2017년 기간중 ※※. ※※※※ ※※※ ※※※※(해외종속기업)의 미결제 현물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관련 자산·부채 계상을 누락*하였음

* '14년 47억원, '15년 27억원, '16년 273억원, '17년 419억원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3.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4.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2조, 별표4, 별표5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 문단 18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문단 42, 문단 43, 문단 45, 문단 46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적용지침 AG38B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는행은 2014.11.17.~2018.6.4. 기간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12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퇴직급여법」 제33조
2.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6조
3.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다.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시 관련사항 공시 누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1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은 2016.11.16. 및 2017.2.8. (주)●●●●●●●, (주)①①①①①①①①과 각각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등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 2017.2.27. 및 2018.3.26. ㉠㉠㉠㉠(주), (주)◆◆◆◆◆◆◆◆와 각각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포함된 자동차금융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을 공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법」 제31조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라. 구속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개인에 대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은 비대면 휴대폰 앱을 활용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 판매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함에 따라

2017.7.17.~2017.8.18. 기간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9개사 및 신용등급 7 등급 이하인 개인 1명 등 총 10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대출(10건, 대출액 21억 1,950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펀드 10건(1,230만원)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마. 감사위원회 보고서 미제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은 2017년 상·하반기 감사위원회 보고서 2건을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지배구조법」 제20조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금융데이터정책과 자산운용과 금융정책과	일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76 02-2100-2697 02-2100-2663 02-2100-2833	02-3145-7062